

‘SRF 갈등’ 영광군 법정 분쟁

정부 무대책이 원인 ... 허가해주고 민원 일면 중지·취소 ‘뒷북’
수천억 공사비 투자 사업자·건강 불안한 주민 모두가 피해자

폐기물을 고효율로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SRF(고형연료제품)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광주·전남 지자체와 사업자,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부처의 미흡한 허가 기준, 부처 간 협조 체계 부실, 오염에 대한 주민 불안감 미해소 등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수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주민민원을 이유로 뒤늦게 가동 중지나 허가 취소를 당한 사업자, SRF로 인해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주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부실한 제도의 개선과 사업자·주민에 대한 보상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자, 지자체, 주민 모두 수년간 법정 분쟁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행·재정력의 낭비도 커져 SRF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나주시가 한국남방공사(이하 한남)에서 2700억원을 들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의 SRF 사용 허가를 취소하면서 다시 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운영자인 한남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업 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남이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고, 3개월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톤을 소각한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한남은 바로 다음날 취

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기 등의 법적 조치로 응수했다. 한남 측은 “관련 법령은 SRF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횟수별 경고, 금지명령, 개선명령 등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SRF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며, 나주시는 관할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한남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또다시 법정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SRF 논란은 영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영광군 흥농읍 성산리에 건설중인 영광SRF발전소가 영광군의 SRF 연료 불허하기로 사실상 공사 중 단됐다. 영광SRF발전소는 지난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MW 발전 허가를 취득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홍보, 건축(변경)허가, 전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을 받아 1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광군이 지난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불허, 갈등이 불거졌다. 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에 행정소송을 제기,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영광군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지난 14일 영광군이 재물

허 처분을 내리면서 법정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발전소 측은 “그동안 1년여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영광군의 이번 조치로 공사가 중단돼 수백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영광군, 군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발전소 외곽 주민들까지 반대사위에 나서자 불허 처분을 한 영광군 전전공공하고 있다. 폐소할 경우 영광군 전체 예산 규모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마지막 단계인 고형연료 허가에서 군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불허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그 결과에 따라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이 같은 허가·민원·취소 또는 중지·법정 분쟁 등으로 이어지는 SRF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SRF는 당초 정부 권장 사항이었다가 산재생에너지공급인증이 취소되는 등 부처 간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고형연료의 품질 기준 마련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이미 투자를 시행한 사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상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대선 승리 조건은 통합과 중도 확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인터뷰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집값 안정화 추세, 각종 경제 지표 호전 등을 들어 차기 대선 승리를 자신했다.

〈인터뷰 3번〉
송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통합과 중도 확장’을 거론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내부

진통을 거쳐 원팀이라는 단일대오를 형성해 중도 확장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에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데다 이질적 구조로서 당내 단합을 이루는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봤다. 차기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으로 ‘공정’과 ‘성장’을 제시한 송 대표는 역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촛불혁명 정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정권재창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선과 관련, 송 대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상대하기 쉽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겸사 겸사 대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100%는 아니지만 보수 언론과 검찰이 가장 큰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 송 대표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며 이 후보는 대



장동과 관련, 단 한문도 안 받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가 돈을 받았다면 박근혜-유병우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극 도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 송 대표는 성과 관련, 송 대표는 성과

남시가 확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송 대표는 북한 측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조건만 달지 않는다면 대선 전에 종전선언은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기초단체장 예비 경선과 관련해서는 당헌·당규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했으며, 탈·북당에 따른 감염 조항의 이중 처벌 논란에 대해 입사부처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대선 후보 ‘조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인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우 장례, 5일간 ‘국가장’ 치른다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관련기사 2면〉
행정안전부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례행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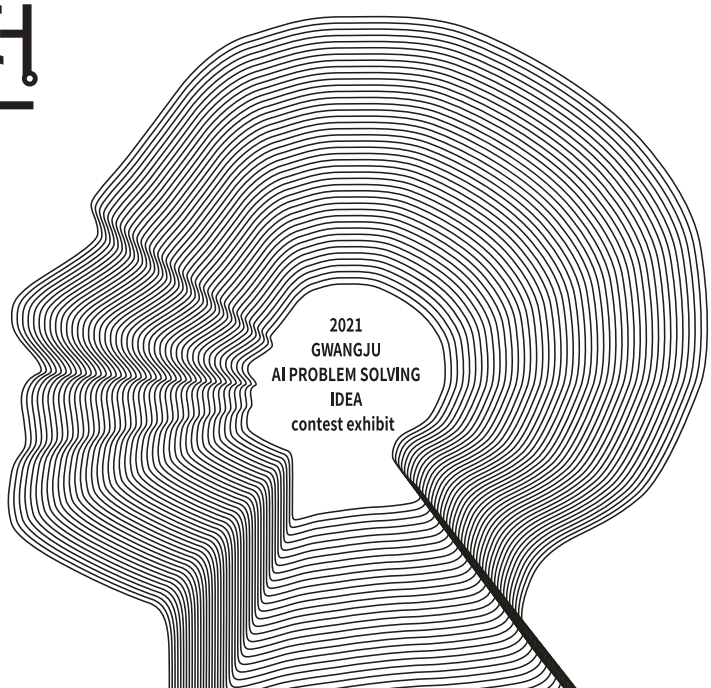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

한 장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묻는 말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부수석어보관이 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 등의 과오에 반감이 여전한 진보 진영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형 인공지능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2021 Gwangju AI Problem Solving Idea Contest Exhibit

공모분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화 아이디어

일정

신청기간 2021. 10. 18.(월) ~ 10. 31.(일) / 약 5주간
선정방법 서면평가 / 총 16개팀 선발(수상자의 2배수)
1차 합격발표 2021. 11. 9.(화) 18:00 호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 공고
대회
행사일시 2021. 11. 15.(월) / 10:00 ~ 17:00
행사장소 광주영상융합문화관 4층 ICT코플렉스
참가대상 1차 선발자 총 16개팀
선정방법 발표평가 / 총 8개팀 시상

접수방법

호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http://honamict.kr/)
프로그램 > 프로그램신청 > 광주형 인공지능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참가자격

- 1) 광주지역 거주자 중 개인 또는 팀(최대 4명) 누구나(나이 제한 없음)
* 팀일 경우 팀장은 광주지역 거주자 필수(중방제출), 팀원은 타지역 관계없음
- 2) 시 또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화 아이디어에 프로토타입* 출품
* 지역 특화산업: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공공 외 기타 분야
* 프로토타입: 최소한의 기술 구현 가능여부 테스트베드

시상내역

구분	인원(팀/명)	지역대회
1등(대상)	1	3백만원
2등(최우수상)	1	2백만원
3등(우수상)	2	각 1백만원
장려상	4	각 50만원
		총 9백만원

* 제세공과금 시상자 부담(원천징수)

문의전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610-2453, 2460 (이메일 a940912@gitct.or.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꼭 확인하여 주세요!

